

간호법 통과에 광주 의료계 환영 성명·연가 파업 ‘양분’

간호사회 “근무 환경 개선·업무 법적 보호 결실”

의사회 “지역 갈등 조장 악법...17일 총파업도”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지역 의료계가 양분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간호업 종사자들은 근무 환경 개선 여지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반면 의사회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파업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광주시간호사회 등 지역 88개 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통과에 대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은 오랜 기간을 거쳐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이미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검증된 법률이기도 하다”며 “관련 지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험적 요소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검증됐다”고 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도 큰 의미”라며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간호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의사회도 간호법 통과 당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의료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업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돌아가야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라며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의료계 각 직업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이번 악법들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선 안됐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연

가 파업에 나서고도 있다. 연가 파업에 동참하는 지역 의원들은 이날 하루 자율적으로 쉬는

의사회는 나아가 오는 11일 연가 파업을 재차 진행한 뒤 17일 전국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야당의 주도로 1년여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재환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해석...‘충분’ vs ‘부족’ 시·도 입장차 뚜렷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로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법 해석을 놓고 ‘충분하다’ 대 ‘부족하다’는 시·도 간 입장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시·도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 KBS광주방송총국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에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신정책연구원장(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정기영 세한대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김광진 광주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로 이전 논의에 가속도가 붙길 바라며,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가 원한다고 강

광주시 “염려·우려하는 지원사업 방안 법안에 녹여 담자”

전남도 “당초 초안에 담겼던 이전지역 지원사업 모두 누락”

제로 할 수 없다. 지자체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 통과로 조금 더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금주 전남부지사는 “주민 수용성 문제(이전 지역 지원사업)는 별개로 하고, 특별법 통과로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양 시·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광진 광주시장은 이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가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김 부시장은 “중정 부지를 (개발)판매해서 얻은 이익금 가지고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야 하는가? 공항 시설뿐 아니라 소음 완충지역에 대한 규모, 지원시설 규모 등 기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가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을 테니 광주시가 판매금을 가지고 알아서 해보세요 식이었다”며 “특별법 통과로 추가 이전 비용에 대해 국가가 뒤로 빠지지 않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됐다”고 말했다.

또 “(국가 지원이 가능하기에) 충분한 논의 구조 안에서 이전 받고자 하는 지자체의 요구안을 제시하면 지자체끼리, 국가와 함께 논의의 길이 많이 넓혀질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문금주 전남부지사는 특별법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 전남도의 입장을 밝혔다

문 부지사는 “김광진 부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먼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배경

을 돌이켜 보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당초 군공항 특별법에서 정한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존 법안의 보완책으로 이전 지역에 대한 법정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특별법이 필요했고, 지난 7월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합의해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기로) 발표했는데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문 부지사는 또 “이번 특별법은 기존 법안과 비교 시 기부 대 양여 방식 외에 딱 하나 ‘이전 사업비가 부족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 마련 외에는 알맹이가 없다”며 “국가 지원 부분에 대한 절차와 규모, 범위는 또 다시 시행령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남도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과정에서 유치의향서 제출, 추가 지원책, 민간공항 이전 등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했다.

이슬비기자



5·18묘지 현장학습 나온 초등학생들

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조봉초 학생들이 참배-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추념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 THE RED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2023. 5. 20. ~ 29.